

광남시론

위인백

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거저 이룩된 나라가 아니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분단에 따른 동족상잔의 폐해를 딛고, 남다른 교육열로 허리띠 졸라매며 피땀으로 경제를 발전시켰으며,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 바쳐 투쟁함으로써 이룩한 K-민주주의는 세계인의 부러움으로 민주주의의 교과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이룩한 산업의 역군들과 민주화의 선봉에 섰던 민주유공자들은 중년이라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넘은 노년에 이르러 젊은 날의 희생을 보장받거나 노년의 안락한 생활은커녕, 인간다움 없는 AI가 개인의 필요와 수요에 맞춰 지식을 찾아주고 원하는 형태로 가공해 주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 이에 따르지 못함으로써 젊은 층으로부터 소외되고, 반려동물보다 못한 처지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곳곳에서 일상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인간존재의 근본적인 부조리에 주목하면서 세상에는 경멸할 것보다는 찬탄할 것이 더 많다는 말을 남겼다. 결국 새로운 시대의 희망은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한 공동체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 세상을 가꾸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클릭하지 못한 노인의 인권

것이다.

빛과 소금을 종교적인 의미보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민의 자세로 풀어보면, 빛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기 위해 존재하고, 소금 역시 눈에 띄지 않지만, 부패를 막고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노년에 이르면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군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서 더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새로운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에 클릭하지 못함으로써 권리와 희망이 멀찌버린 난감한 상황이다.

한국인권교육원은 질곡의 유신독재 시절 양심수를 후원하고 석방 운동을 전개해 온 국제 엠네스티 회원들이 중심이 돼 2000년에 설립한 이래, 인권선장을 위해 해마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기념식에 이은 인권학술 포럼 및 올해의 인권 활동가를 선정하여 인권상을 시상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오는 8월 26일엔 5·18민주화운동 교육관에서 ‘클릭하지 못하는 시민-AI시대, 노인의 디지털 인권선언’ 포럼을 갖는다. 이 포럼은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를 차별과 시민권,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는 대화가 될 것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노인들을 디지털 교육이나 보호의 대상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정보접근권·평등권·자기 결정권·개인정보 보호권을 지닌 동등한 시민이자 권리주체로 바라보고자 한다.

또한 포럼에서 노인 디지털 인권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지방정부 정책과 ‘노인 디지털 인권보장조례’로 이어지도록 광주 시민사회가 노인의 디지털 격차를 차별·인권·시

민권의 문제로 공문화해서 인권선언과 지방조례 제안까지 연결하는 행사다.

결론적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디지털 사회, 클릭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노인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명제를 가지고 한국인권교육원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시민공감대 형성을 기획한 포럼이다.

인공지능(AI)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수만 있을 것인가! AI와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그 변화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살파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선의와 관심이 쌓여 신뢰가 구축되고, 그 신뢰가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저마다의 생활 터전에서 규범에 따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에 따른 이해관계로 때론 충돌하고 경쟁하면서 인권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영역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끼니를 걱정하면서도 허리띠 졸라매며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작했고, 가르치는 배움의 길을 멈추지 않는 교육열로 문맹률 78%를 짧은 기간에 극복했던 경험이 있으니 클릭하지 못한 노인들을 외면하거나 방관 말고 더불어 소통하도록 하자.

오늘날 AI 시대를 맞이해 상상을 초월한 발전으로 빠른 당혹스럽다.

클릭하지 못함으로써 세대 간의 격차와 갈등을 비롯하여 지역과 단체, 개인 간에도 불편한 관계가 발생하며 인간다운 사회발전보다 우리 사회의 불안 요소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정부나 지자체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같은 땀, 다른 대우 속 임업의 눈물

‘임야’라는 이름표가 붙는 순간 직불금 지원 단가는 바로으로 추락한다. 땀방울의 순수한 가치나 수확물의 뛰어난 품질이 아닌, 오직 ‘땅의 이름’만으로 국가 보조를 차등 적용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은 현장 임업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대적 박탈감과 깊은 자괴감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 기막힌 것은 공익적 가치와 환경 보존을 바라보는 국가 행정의 불공정한 시각과 편향된 잣대다. 농업이 창출하는 환경 보존 가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증액과 직불금 인상이라는 정당한 명분을 부여하면서도, 산림이 매일같이 뿜어내는 탄소 흡수·산소 배출·토사 유실 방지·수자원 함양이라는 천문학적 공익 가치는 임업인이 마땅히 감내해야 할 ‘무상의 의무’로 차부하기 일쑤다.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탄소중립 달성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 국토의 허파 역할을 수행하는 임업의 특수성과 헌신은 기존 농업 중심의 틀에 갇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균형과 차별의 근원에는 산림 행정 구조가 지닌 근본적인 한계와 조직적 이원화가 자리 잡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오롯이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첨단 농업 기술 보급, 농가 복지 증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예산과 조직을 갖춘 것과 달리, 산림청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대국민 재난 대응이라는 막중한 임무에 늘 짓눌려 있다. 정작 산림 생산의 주체이자 경영자인 임업인을 다각도로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지

원할 여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산림 보호’라는 명분 아래 옥죄어오는 촘촘한 규제망은 내 산에 작은 작업 진입로 하나 내지 못하게 손발을 묶어두어 교량화된 임가에 심각한 이중고를 가하고 있다.

이제는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태의연한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설 때다.

무엇보다 지목에 갇힌 직불금 구조를 뿌리부터 뒤흔들어서 바로잡아야 한다. 불합리한 규제 독소 조항을 전면 철폐하고, 산림이 제공하는 탄소 흡수와 생태계 보존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해 직불금 단가를 농업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 땀 흘린 만큼의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때 비로소 임업인의 자발적인 산림 경영과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이 가능해진다.

이율리 임업인을 온전히 전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담 행정 체계 재편과 예산 확충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산림 보호라는 일방적 규제 행정에서 벗어나 상생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교량화된 현장에 맞춤형 첨단 기계화 인프라와 재해 대응 안전망을 대대적으로 구축하여 임업 경영의 문턱을 효과적으로 낮춰야 한다.

산림은 가꿔두고 보호만 하는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의 푸른 미래를 개척할 핵심 산업 자원이자 국가 자산이다. 땅의 이름으로 차별받지 않고, 임업인의 땀방울이 농업인의 땀방울과 똑같이 대우받는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대한민국 산림 산업의 푸른 지평이 펼쳐질 것이다.

들이 숙련된 인재로 성장할 기회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 청년이 AI를 도구로 삼아 보다 효율적이고 고차원적인 분석과 창의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력 사다리를 설계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의 역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단순한 숫자 채우기식 채용 보조금이나 AI 도구 사용법을 알려주는 데 그치는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 숙련자의 지도를 받으며 AI를 활용하고 실전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훈련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 역시 단기적인 경력직 선호에서 벗어나 주니어 직무를 재설계하고, 청년 인재가 AI 시대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한다.

기술은 인간의 노동을 없애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노동의 영역을 만들어왔다. 중요한 것은 AI가 어떤 일을 대신하느냐가 아니라, AI가 대신한 자리에 인간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다.

AI 시대 속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는 ‘노동의 종말’이 아니다. AI를 발판 삼아 높은 수준의 노동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새로운 경력 사다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기술 혁명의 시대에 필요한 ‘노동의 고도화’다.

기고

박철형

임업인



대한민국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푸른 산림, 그 험준하고 가파른 산자락에 뿌리를 내리고 묵묵히 나무를 가꾸며 이 땅의 생명력을 일구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현장의 임업인들이다. 그러나 국가 행정의 시선 끝에서 이들은 언제나 ‘2등 국민’이자 정책 우선순위에서 철저히 밀려난 ‘열외의 존재’였다. 똑같이 피땀 흘려 농임산물을 수확해 국민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고, 국토 보전과 환경 파수꾼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지목(地目)’이 임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가 내미는 혜택과 행정적 지원은 천양지차다. 오늘날 현장 임업인들이 직면한 고통은 단순한 예산 부족이나 정책의 부재가 아닌, 제도 와 행정이 오랜 세월 견고하게 쌓아 올린 ‘구조적 차별의 벽’에서 비롯된다.

가장 시급하게 수습대에 올려야 할 대목은 바로 현장 임업인들의 목을 죄어오는 보조금 및 직불금 제도의 불합리성과 이중잣대다. 동일한 밤이나 임산물을 수확해 시장에 출하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행정상 ‘농지’로 분류되면 넉넉한 직불금 혜택과 다각적인 정책적 혜택을 받지만,

취재수첩

종말의 공포, 고도화의 기회

김은지

산업경제부 기자



새로운 기술 혁명이 거세게 몰아칠 때마다 세상은 늘 ‘일지라의 종말’을 논하며 공포에 휩싸이곤 했다.

산업혁명 초기 영국의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었던 ‘러다이트 운동’부터 자동차 보급으로 마부가 설 자리를 잃었던 시절까지. 위기론은 매 차례 산업혁명의 걸목마다 반복된 단골 손님이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마부가 사라진 자리엔 전로 운전 직종이 태어났고, 전화교환원이 사라진 공간엔 거대한 정보통신 산업이 들어섰다.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노

동의 종말만이 아닌 인간 노동의 방식과 가치를 끌어올리는 ‘노동의 고도화’였다.

최근 인공지능(AI) 고도화가 청년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소식이 노동 시장을 또 한 번 흔들고 있다. 최근 4년간 감소한 청년 일자리 28만5000개 중 94%에 달하는 26만8000개가 AI 고노출 업종에 쏠렸다는 조사는 청년층의 실업 불안을 극대화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AI 기술 그 자체’에 두고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한은의 진단대로 AI는 청년 고용을 직접 파괴하기보다 기업의 채용 방식과 업무 형태의 변화를 가속하는 촉매제에 가깝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AI에 밀려날 것이라는 무력감이 아니다. 청년의 노동이 AI와 결합해 더 높은 차원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동의 고도화’ 전략이다. 조금 단계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해서 청년

사설

2차 공공기관이전 “통합 우대 약속 지켜라”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소속 기관 350여곳에 대한 이전계획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공개키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이번 이전이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이후 21년 만인데다 정부가 기존 분산 배치가 아닌, 산업 기반과 정주 여건을 갖춘 지역에 기관을 집중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정부가 그동안 전국 최초로 광역 행정통합을 한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약속을 거듭 밝힌바 있어 어떻게 현실화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통합특별시는 이 같은 정부 기조에 맞춰 유치 대상을 기존 40개에서 45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섰다.

행정통합 전 추진했던 에너지와 인공지능(AI), 문화예술 등 5개 미래발전 분야에 통합이후 광주 군공항의 반도체 팹 투자계획에 맞춰 반도체·AI 관련 기관을 보강했다. 최우선 유치 대상은 농업중앙회와 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마사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10개 기관이다.

농협·수협중앙회를 유치해 농수산업의 생산과 유통, 금융을 하나로 연결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은 AI·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기술 실증과 기업 지원 기능을 보완할 기관이라 반드시 필요하다.

통합특별시는 7개 분과 100명으로 공공기관유치추진단을 구성, 정부가 행정통합 과정에서 제시한 우대 약속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이전 대상 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지원계획 마련과 적극 홍보에 돌입했다.

특별시의회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인, 통합법을 통해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이 세 차례에 걸쳐 제시됐으며 정부에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통합특별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이번 이전때 지역산업과 밀접한 공공기관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 통합특별시와 지역 정치권은 남은 기간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삼성전자·SK 명예도로명 지정이 갖는 의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명예도로명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행정통합후 처음으로 부여되는 명예도로명으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895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기를 건설하는 이들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환영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만간 내부 검토를 마치고 두 기업의 반도체; 팹이 들어서는 광산구에 각 기업의 명예도로명주소를 지정하도록 협조요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14일 이상 의견 수렴,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 신청·지정절차를 밟아 명예도로명주소를 부여하게 된다.

다만 통합특별시는 광산구 흑석사거리에 ‘삼성로’가 2024년 명예도로명으로 부여돼 있어 이와 중복되지 않도록 세부 명칭을 검토키로 했다.

명예 도로명은 실제 주소로 쓰는 법정 도로명이 아니라, 기존 도로에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기업 유치, 국제교류 같은 상징성을 담아 별도 도로 붙이는 이름이다.

법정 도로명이 아니어서 우편물 수령 등 실제 주소로는 제한이 있지만 안내표지판·도로명판 등에 함께 표기돼 지역의 역사·인물·기업 등을 알리는 용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현재 광주권역에는 4·19로, 기아로, 삼성로, 건축자재로, 유네스코민주인권로, 윤상원 민주로 등 10개의 명예도로명이 부여돼 있는 상태다.

이번 명예도로명 추진에는 895조원 규모(삼성전자 425조원, SK하이닉스 470조원)의 투자를 하는 이들 기업에 대한 고마움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광주 군공항 250만평 부지에 2028년부터 팹 건설에 착수, 2029년 1차 완공을 거쳐 2030년 6월 초도 물량 양산을 목표로 각각 반도체 팹 2기씩, 모두 4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투자가 현실화돼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될 경우 연간 1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매출이 추가로 발생하고 2만명 규모의 직접 고용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또 소재·부품·장비 등 연관 산업의 간접 고용 효과와 함께 정주인구 10만명 규모의 첨단 자족도시 조성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통합특별시는 이런 청사진이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게 관련된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인센티브 또한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 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정 치 부	370-7040	논 설 실	370-7200			
우편번호 61234			산업경제부	370-7020	임 원 실	370-7000			
대표전화 (062) 370-7000			사 회 부	370-7030	총 무 국	370-7093			
팩스 (062) 385-5400			문화체육부	370-7234	사 업 국	370-7090			
			편 집 부	370-7082	광 고 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